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신축 확정에 거센 반발

한수원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의결…"한시적 운영" 밝혔지만 우려 가득
지역민·환경단체 "영구저장시설과 다름 없어…일방적인 결정 철회" 촉구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신축이 확정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시적 활용을 위한 신축'이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이번에 신축이 결정된 시설은 영구저장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원전 내부에 신축을 결정하면서 타지역에 중간·영구처분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결국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에 핵폐기장까지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 원전과 경북 울진 한울 원전 부지 내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빛원전에 건설될 건식저장시설 규모는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2월 한수원이 확정한 부산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규모(2880다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이다.

한수원은 설계·인허가·건설 등 총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예상 포화시점인 2030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원전 적극 활용 안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전력수습기본계획'을 내놓고 노후 원전 계속운영을 하기로 하면서, 고준위 폐기물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앞당겨진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 쓰이고 남은 핵연료 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선 세기가 강해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한수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용 후에도 폐기물에서 내뿜는 강한 열기와 독성물질 때문에 원전 내부 물탱크(습식저장소)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저장시설 포화를 앞두고 원전 내부에 가장 안전한 방식인 습식저장방식이 아닌 건식저장방식으로 부랴부랴 짓고 있다는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방식이다"며 "포화를 앞둔 원전에 임시 보관 시설 건설로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임시시설이라는 말조차도 믿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40년이 넘도록 역대 모든 정부가 중간·영구 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환경단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지난 7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역대 정권에서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아직까지 부지조차 선정되지 못했다"며 "영구시설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이번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기존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주민에게 또 다른 핵발전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다"며 "한수원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하고, 한빛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의 결정이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영광 위원장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최소한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며 "지역민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지역민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영구처분시설 건설 년도가 명시되기 때문에 이번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의결된 계획안은 사전준비작업으로,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시점보다 먼저 완공하기 위해 빨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갑질·비위 논란' DJ센터 사장 광주시 감사위원회, 경찰 고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갑질·비위 논란에 휩싸인 산하기관장에 대해 해임 요구에 이어 경찰에도 고발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감사위는 김 사장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특정 업체에 전시관을 무상으로 빌려줘 3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센터에 끼쳤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서부경찰은 절차에 따라 관련인 조사를 진행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김 사장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 감사위는 정기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사장 해임을 센터에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해 센터 노조가 김 사장의 폭언 등 갑질 행위와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기감사를 했다. 감사위는 김 사장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시는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

김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 의혹과 별개로 경찰은 센터가 내부 위원회의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행정 절차 마무리 인근 상인 "철거 공법 반대" 목소리 여전

6월 해체작업 앞두고 갈등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시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오는 6월 해체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철거 공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대산업개발과 서구청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서구청에 '주민안전대책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으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고 3차례 거부했다는 점에서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6일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화정아이파크 해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공사장비를 현장에 반입하고 구조물 철거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먼저 2~3개월동안 시스템 비계, RCS(Rail Climbing System),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카 등 해체작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마감재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치고 2027년 12월 재시공을 완료한 뒤 입주자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상가 피해자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현대산업개발이 벽체는 '압쇄 공법'으로 부수고 기둥 등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우(DWS) 공법'으로 잘라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상가주민들은 "안정화 작업 당시 쓰인 DWS 공법이 상가에 비산먼지 등 많은 피해를 줬다"며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가 입주민들로 구성된 화정아이파크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31일 광주시에 서구청에 대한 '민원 이행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부터 철거 공법에 대한 주민안전대책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했으나 잇따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피해보상대책위는 "철거 공법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서구청이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붕괴사고 이후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이와 관련 "피해 상인들은 법적으로 화정아이파크 철거 관련 '당사자'가 아니며, 현 철거 공법 또한 전문가 기술검토를 충분히 거친 사항으로 그 이상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가 피해보상 대상 상가 총 87곳 중 보상 협의를 마친 곳은 78곳이며, 금호하이빌 상가 7곳 등 총 9곳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통맥축제' 북적 양동시장의 '봄'

8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 '통맥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갖가지 먹거리를 구경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한달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야시장 '통맥축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

청보호 사고 원인은 '어구 적재함 불법 증축'

목포해경, 선주 불구속 송치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어구를 추가로 더 싣기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시설물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목포해경은 청보호전복사고 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청보호 선주인 60대 A씨를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어구적재함을 불법으로 6단에서 7단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선장, 기관사도 관련혐의는 있으나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해 이들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청보호는 조선소에서 건조 후 시운전 단계에서는 어구적재함이 6단으로 제작 됐으나, 이후 사설업체를 통해 7단으로 불법 증축된 것이 확인됐다.

전복 사고 후 두 달여간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7일 "전복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내놨다.

복원성 상실의 주된 이유는 바로 불법증축된 어구적재함이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선박의 무게중심이 올라가 선체가 쉽게 기울어져 갑판 너머로 바닷물이 밀려들어왔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청보호의 불법 증축을 한 사설업체는 관련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지만, 수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4196	1	광양시 광장로112-20, 105동 12층 1207호 [중동,성호아파트] 59.94㎡	아파트	68,000,000 68,000,000	
2022타경 4455	1	여수시 여서로134, 113동 3층 301호 [여서동,현대아파트] 84.94㎡	아파트	211,000,000 211,000,000	
2022타경 55972	1	광양시 광장로70, 213동 13층 1303호 [중동,성호2차아파트] 59.79㎡	아파트	83,000,000 83,000,000	
2022타경 56258	1	순천시 가곡길30, 102동 3층 308호 [가곡동,가곡신영아파트] 49.77㎡	아파트	64,000,000 6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 2169	1	광양시 중동 1299-1 182.9㎡	대	500,363,600 500,363,600	일괄매각
		광양시 중마청룡길 30-8 독서실 1층12.25㎡ 2~4층108.15㎡ 5층84.89㎡	다가구,근린시설		
2022타경 3988	1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507 393㎡ [공유자이영선1/2지분전부]	대	43,969,900 43,969,900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구례군 토지면 반석길 17 1호 단층53.88㎡ 제시외 단층차양 등 46.1㎡ [공유자이영선1/2지분전부]	주택		
		구례군 토지면 반석길 17 2호 단층10.24㎡ [공유자이영선1/2지분전부]	창고		
[대지/임야/전답]					
2022타경 2732	1	여수시 오림동 398-7 474.5㎡	대	1,176,760,000 1,107,196,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2022타경 2916	1	여수시 광무동 479-3 83㎡ [공유자박인호2/11지분전부.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4,632,630 3,244,35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3865	1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0-2 298㎡ [지적경계불명확,경계측량요]	대	46,190,000 46,190,000	배수시설소재
	2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51-4 602㎡	대	88,494,000 88,494,000	지적경계불명확,경계측량요
	3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376-2 222㎡	대	34,410,000 34,410,000	지적경계불명확,경계측량요
2022타경 52966	2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804 2734㎡ [경계측량요]	전	106,138,000 106,138,000	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807 1540㎡ [경계측량요]	전	50,280,000 50,280,000	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2966	4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813-2 2773㎡ [경계측량요]	전	64,293,000 64,293,000	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산118-1 14876㎡ [연고미상분묘소재]	임야	35,702,400 35,702,400	경계측량요.입목포함
2022타경 53907	1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7 717㎡ [공유자최도남3/11지분전부,공유자조기훈2/11지분전부,공유자조문화2/11지분전부,공유자조태훈2/11지분전부]	전	18,185,530 18,185,53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19 281㎡ [공유자최도남3/11지분전부,공유자조기훈2/11지분전부,공유자조문화2/11지분전부,공유자조태훈2/11지분전부]	대	24,599,300 24,599,3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54146	1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산63 11306㎡	임야	237,426,000 237,426,000	입목포함
2022타경 55279	1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102-3 285㎡ 제시외 관정 1식 [제시외관정포함]	전	52,175,000 43,340,000	수목포함.연고미상분묘소재
2022타경 56029	1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46-2 684㎡ [공유자김민수1/7지분전부]	임야	3,810,850 3,810,85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입목포함
	2	동소 546 719㎡ [공유자김민수1/7지분전부.입목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임야	2,567,850 2,535,707	지분매각.연고미상분묘소재
	3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1122 456㎡	대	18,826,000 18,826,000	수목포함
[기타]					
2022타경 40	1	순천시 서면 구상리 289-1 3313㎡ 제시외 창고 등 330.1㎡, 전처리설비, 제성탱크외	공장용지	2,231,915,600 2,231,915,600	일괄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폐기처분된4점제외,감정평가서참조],제시외기계기구포함.제시외건물포함
		동소 290 1511㎡	공장용지		
		순천시 서면 세동길 20 가동호 단층864.66㎡	공장		
		동소 나동호 1층152.96㎡ 2층115.89㎡	공장		
2022타경 52966	1	고흥군 점암면 성주길 109-26 단층78.2㎡ 제시외 가추 등 27.4㎡	주택	78,803,200 78,803,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수목포함.입목포함.경계측량요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746-1 317㎡	대		
		동소 750 370㎡	임야		
		동소 751-2 112㎡ 제시외 창고48.6㎡[본건7지상소재]	대		
		동소 747-1 734㎡	대		
[자동차,중기]					
2022타경 58513	1	사용본거지:순천시 연향번영1길 13, 202호 [연향동] 등록번호:41도2784 차명:제네시스 연식:2016	자동차	19,000,000 19,000,000	보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매상사
2022타경 58872	1	사용본거지:순천시 공마당1길 39 [금곡동] 등록번호:36고2127 차명:QM3 연식:2017	자동차	8,000,000 8,00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0수자동차매매상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 2023. 4. 24. [월]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23. 5. 1. [월] 16: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주헌